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470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김기현 · 김장겸 · 김미애
서천호 · 김정재 · 추경호
곽규택 · 백종현 · 주진우
우재준 · 이인선 · 신동욱
의원(1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앙을 바꿀 자유, 그리고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교육, 실천, 예배, 의식에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유념합니다.

중국 당국은 올 10월초 중국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의 조선족 김명일(중국어명 진밍르(金明日), 영어명 에즈라 진(Ezra Jin))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와 교인을 전격 체포하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래 40여 년간 있었던 최대 규모의 종교인 박

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규약」 총강령에서 인권의 존중·보장,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에서 종교·신앙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三自) 애국교회(개신교), 중국 천주교 애국회, 중국 이슬람교 협회, 중국 불교 협회, 중국 도교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종교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삼자(三自) 애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가정교회와 중국 천주교 애국회에 속하지 않은 지하교회, 그리고 티베트 불교와 위구르 무슬림의 계속된 수난, 그리고 최근 ‘종교의 중국화’ 정책에 따른 교회내 십자가 제거와 중국공산당 슬로건 게시, 예수상과 성모상의 시진핑 주석 초상화로의 대체 등은 국제사회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시온교회’와 김명일 목사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2월 발효된 개정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686호)에 항의하는 가정교회 목사들의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같이 동참했다가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9년형에 처해진 중국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추우성약(秋雨聖約) 교회’의 왕이(王怡) 목사의 경우,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에서 국제법 위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A/HRC/WGAD/2019/36).

올 10월 12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공산당의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지도자의 구금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Detention of Zion House Church Leaders in China), 11월 7일 미국 연방상원은 중국공산당의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박해, 김명일 목사와 시온교회 지도자의 구금을 규탄하는 결의 제463호(S. RES. 463)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45개국 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시온교회’ 지도자의 즉각적 석방과 중국내 기독교인이 자유롭게 예배를 올리고, 공동체를 위해 공개적으로 사역하며, 두려움 없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공동 기도 청원(BRI and BRICS Solidarity Prayer with Zion Church)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목사와 교인 30여 명의 체포·구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될 것을 촉구합니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당국이 모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보장하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에 대한 통제, 감시,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한 양자 외교채널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중국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종교인을 석방하고, 중

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보장을 권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

중국 당국은 올 10월 초 중국 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의 조선족 김명일(중국어명 진밍르(金明日), 영어명 에즈라 진(Ezra Jin))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와 교인을 전격 체포하였음.

중국은 이미 「중국공산당 규약」 및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를 통하여 주요 종교를 통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종교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계속해왔으며, 2014년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음.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목사와 교인의 체포·구금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규탄 성명, 미국 연방상원의 규탄 결의가 있었으며, 45개국 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시온교회’ 지도자의 즉각적 석방과 중국 기독교인을 위한 종교·신앙의 자유를 염원하는 공동 기도 청원에 동참하였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목사와 교인 30여 명의 체포·구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중국 당국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될 것을 촉구하며, 중국 당국이 모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보장하고, 가정교회와 지하교회

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에 대한 통제, 감시,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한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한 양자 외교채널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중국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종교인을 석방하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보장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